

카타르 단교 사태를 통해 본 중동 지역의 정세 현황과 전망

I. 이슬람권 일부의 對카타르 단교 사태 및 경제봉쇄	1
II. 단교 사태 및 경제봉쇄의 배경	3
III. 단교 주도국들, 카타르에 압박 계속	9
IV. 향후 전망과 시사점 및 대응	20

확인 : 소 장 권우석 (3779-5701)
wskwon@koreaexim.go.kr

작성 : 선입조사역 오경일 (3779-6664)
oki1122@koreaexim.go.kr



요 약

I. 이슬람권 일부의 對카타르 단교 사태 및 경제봉쇄

□ 사우디아라비아 등, 對카타르 외교관계 단절 및 경제봉쇄

- 5월 23일 카타르 국영 뉴스 통신사 QNA의 보도 파문(카타르 국왕이 이란을 옹호하고 미국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 발생을 계기로 6월 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 4개국은 카타르와의 외교관계 단절 및 경제봉쇄 조치

□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은 6월 8일 및 7월 24일 카타르와 연계된 테러리스트 및 테러 조직 명단을 발표, 카타르가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

- 동 사태의 이면에는 중동 지역 전체에서의 패권을 확립하고 이란의 국제사회 복귀를 저지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거시적 외교전략이 존재

II. 단교 사태 및 경제봉쇄의 배경

□ 수니파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 시아파의 맹주 이란과 대립

- 수니파 절대왕정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걸프협력위원회(GCC)를 통해 걸프 지역에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 행사
-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로서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예멘 등 시아파가 다수인 중동 국가들을 아우르는 “시아파 벨트”를 형성, 사우디아라비아를 압박

□ 카타르의 개혁정책과 Al-Jazeera 방송, 여타 왕정 국가들의 반발 초래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은 카타르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과 카타르의 위성 방송사 Al-Jazeera를 통해 자국 내에서 언론 자유에 대한 요구와 개혁적 여론이 조성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

□ 카타르는 강대국 사이에 낀 소국으로서 독자적, 다원적 외교노선 견지

- 카타르는 독자적, 중립적, 다원적 외교노선을 견지 :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이란은 물론 무슬림형제단 등 걸프 지역 국가들이 적대시하는 조직들과도 우호관계 유지
- 2016년 1월의 경제제재 해제로 이란이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카타르가 이란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강력 반발

요 약

□ 카타르 내의 무슬림형제단은 단교 조치의 중요한 표적

- 세계 최대 규모의 이슬람주의 단체인 무슬림형제단은 이슬람주의에 기반한 공화정을 추구 ⇨ 중동의 왕정 국가들에게는 배척의 대상이나, 카타르는 무슬림형제단과 우호관계 지속

III. 단교 주도국들, 카타르에 압박 계속

□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 카타르에 관계 정상화를 위한 13개 조건 이행 요구

-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은 6월 22일 카타르에 외교관계 정상화 및 경제봉쇄의 해제를 위한 13개 조건의 이행을 요구 : 카타르의 주권을 다양한 방향에서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내용

□ 오일머니를 무기로 역외국들에 對카타르 보이콧 동참 압력 행사

-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은 카타르와 거래하는 제3국 정부 또는 기업에 대해 자체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 국제신용평가사들, 카타르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단교 사태 및 경제봉쇄 발생을 전후하여 카타르의 외화 표시 장기국채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
 ※ Moody's : Aa2 → Aa3 (5.26) / S&P : AA → AA- (6.7)
 Fitch : 등급은 AA를 유지하되 등급전망 변경(Stable → Negative, 6.12)

IV. 향후 전망과 시사점 및 대응

□ 사태의 조기 해결은 어려울 전망

- 사우디아라비아가 카타르에 대해 과격한 수준의 내정간섭적 요구를 강제하고 이를 카타르가 거부함에 따라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
 : 이란과 터키가 카타르에 대한 지원을 선언하였으며, 쿠웨이트와 오만이 중재에 나서고 있음

□ 경제봉쇄는 중장기적으로는 카타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희석될 전망

- Bloomberg는 경제봉쇄 효과가 카타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조치로 2018년부터 희석되어 중장기적으로는 완전히 상쇄될 것으로 전망

요 약

□ 단교 사태의 추이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내 정치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

- 단교 사태의 결과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우디아라비아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의 정치적 입지 약화 가능성

□ 단교 사태가 OPEC 내부 갈등으로 번져 감산 합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 단교 사태의 지속이 OPEC 내부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反카타르 진영과 이란으로 대표되는 親카타르 진영 간의 대립이라는 형태의 갈등으로 이어져 향후 원유 감산 합의 연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 당행 및 우리 기업의 대응 : 당행 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 카타르 관련 프로젝트 수주시 주의 필요

- 단교 사태 및 경제봉쇄로 인한 불확실성 고조는 카타르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에도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 국별 리스크 상시 점검 및 국별신용도등급 조정 검토로 당행 여신의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 카타르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추진하는 건설기업들은 향후 4개국에서의 건설 프로젝트 발주 참여시 4개국 정부의 보복조치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여 대비할 필요

I. 이슬람권 일부의 對카타르 단교 사태 및 경제봉쇄

1. 국영 통신사 보도를 이유로 카타르에 일방적 단교 선언

□ 5월 23일 : 카타르 국영 뉴스 통신사의 ‘가짜 뉴스’ 보도 파문

- 카타르 국영 뉴스 통신사 QNA는 5월 23일(이하 현지시각) 밤 송고한 기사를 통해, 카타르의 Tamim 국왕이 당일 카타르 군사학교 졸업식에서의 축사에서 “카타르는 이란을 중동 지역의 강대국으로 인정하며, 미국 및 수니파 중동 국가들의 이란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였음.
- 동 기사는 아울러 Tamim 국왕이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에 대해 “미국의 국내문제로 인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평하는 한편,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 아프가니스탄의 무장정파 탈레반, 이집트의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 무슬림형제단 등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하였음.
- 걸프협력위원회(GCC)¹⁾ 회원국인 카타르의 국왕이 GCC 동료 회원국들인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적대관계에 있는 이란을 옹호하고 미국을 비판하는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했다는 내용의 기사는 즉각 국내외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음.
- 이에 QNA와 카타르 정부 대변인실은 24일 새벽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QNA가 해킹당해 ‘가짜 뉴스’가 송고되었다고 해명하였음.
 - 그러나 동 성명이 발표된 지 2시간 뒤 QNA는 카타르 외무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쿠웨이트, 이집트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했다고 보도했다가 수 시간 뒤 이 뉴스도 역시 해킹에 의한 ‘가짜 뉴스’라고 발표하였음.
- 동 보도에 대응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24일, 이집트와 바레인은 25일부터 QNA, Al-Jazeera 등 모든 카타르 언론 매체의 홈페이지의 자국 내 접속을 차단하였음.

1) Gulf Cooperation Council. 1981년 결성된 걸프 지역 산유국들의 지역협력체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의 6개국으로 구성됨.

□ 6월 5일 : 사우디아라비아 등 7개국, 카타르와의 외교관계 단절
공식 발표 및 경제봉쇄 조치 단행

○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슬람권 7개국은 6월 5일 하마스, 헤즈볼라, 무슬림형제단 등 자국이 테러 집단으로 규정한 조직들에 대해 카타르가 재정적 지원을 계속하는 등 2013년 11월의 리야드 협약(Riyadh Agreement)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카타르와의 외교관계 단절을 공식 발표하였음.

— 단교를 발표한 7개국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 예멘, 리비아(동부 지역 임시정부), 몰디브

— 6월 6일 : 요르단, 카타르와의 외교관계 격하 및 카타르 언론 Al-Jazeera 방송의 요르단 내 사업권 폐기 / 모리셔스, 카타르와 단교

— 6월 7일 : 모리타니, 카타르와 단교

○ 2013년 11월 당시에는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금번 단교 사태로 인해 알려진 리야드 협약의 내용에 의하면, 카타르는 ①무슬림형제단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②무슬림형제단 관련 인사들을 카타르에서 추방하며, ③2013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이집트의 el-Sisi 정부의 안정을 지지하기로 약속하였음.

⇒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3개국은 카타르가 리야드 협약을 어기고 무슬림형제단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며 2014년 3월부터 11월까지 카타르 주재 자국 대사들을 소환하였음.

⇒ 이에 GCC 6개국 정부는 2014년 11월 다시 리야드에서 회담을 열고 유사한 내용의 부속협약을 체결, 카타르에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지원의 중단을 재차 요구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카타르와의 모든 육상/해상/항공편 연결을 단절하고, 카타르 국영 항공사 Qatar Airways의 자국 내 영업허가 취소 및 48시간 내 철수 명령 등의 강경한 조치를 단행하였음. 아랍에미리트 역시 카타르 국적 선박·항공기의 자국 공항·항만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음.

○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인 카타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유일하게 육상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육상 수송로 봉쇄로 카타르의 경제와 산업은 물론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임.

□ 6월 8일 : 카타르 단교 사태 관련 “카타르와 연계된 테러리스트 및 테러 조직” 명단 발표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바레인 4개국(이하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으로 표기)은 6월 8일 카타르 단교 사태 관련 “카타르와 연계된 테러리스트 및 테러 조직” 명단을 공식 발표하였음.
 - 동 명단은 카타르, 이집트,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예멘 국적의 개인 59명 및 카타르, 바레인, 리비아 소재 12개 단체를 열거하고 있음.
 - 개인의 경우 국적별로는 이집트(26명)와 카타르(18명)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체는 모두 카타르에 소재하거나(5개) 카타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음(7개).
- 개인 중에는 카타르 국왕의 오촌으로 카타르 왕실의 일원인 Abdullah bin Khalid al-Thani(카타르 외무장관 및 내무장관 역임), 무슬림형제단의 학문적 지도자인 이집트 국적의 Yusuf Abdullah al-Qaradawi²⁾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동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표면상으로는 테러리스트 및 테러 조직을 지원하는 카타르를 응징코자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중동 지역 전체에서의 패권을 확립하고 이란의 국제사회 복귀를 저지코자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거시적 외교 전략이 자리하고 있음.

II. 단교 사태 및 경제봉쇄의 배경

1. 이슬람권 전체의 맹주를 꿈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패권 전략

□ 수니파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 시아파의 맹주 이란과 대립

- 와하비즘(극단적이고 교조적인 이슬람 원리주의)을 건국 이념으로 삼고 있는 수니파 이슬람 절대왕정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수출로 인한 막대한 오일머니와 이슬람 제1의 성지(聖地) 메카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내세워, 수니파는 물론 이슬람 전체의 맹주(盟主)로 자처하고 있음.

2) 국제무슬림학자연맹(International Union of Muslim Scholars) 의장이며, 현재 91세로 카타르에 망명 중임.

- 꾸란(코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교조주의**, 정교 분리를 지향하는 **세속주의의 배격**, 여성에 대한 **전근대적 차별**, 타 종교는 물론 다른 이슬람 종파에 대한 **극단적인 배타성과 공격성** 등이 와하비즘의 특징임.
- 따라서 **와하비즘**은 현재 전 세계 각지에서 준동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들의 사상적 모태로 간주됨.
- GCC는 표면상으로는 걸프 지역 6개국의 정치·경제 협력체이나, 실질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걸프 지역에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구로 작동하고 있음.
 - GCC 6개 회원국들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은 모두 산유국이자 절대왕정 국가임. 또한 오만(이바디파)과 바레인(왕실은 수니파, 국민의 대다수는 시아파)을 제외한 4개국 모두 수니파 국가임.
-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아파의 맹주이자 역내의 유일한 라이벌이며 군사력으로는 자국을 압도하는 이란을 견제코자, 오일머니에 기반한 막강한 자금력을 내세워 가난한 이슬람 국가들을 회유하여 자국의 영향력 아래 두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조 및 직접투자는 비산유국인 요르단, 빈국인 모리타니 등 여러 이슬람권 국가들에게는 중요한 경제적 버팀목이 되고 있음.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원조 수혜 등의 대가로 국제사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을 전폭 지지하고 있음.
- 이란은 시아파의 맹주로서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예멘 등 시아파가 다수인 중동 국가들을 아우르는 이른바 “시아파 벨트”를 형성하여 사우디아라비아를 압박코자 시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슬람 공화주의 혁명을 걸프 지역에 전파코자 하여 동 지역의 수니파 왕정 국가들에게는 제1의 경계 대상이 되고 있음.

□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의 ‘실제 배후’로 지목받는 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부 차원에서는 와하비즘의 전파를 표면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으나, 대신 왕족, 고위 성직자, 기업가 등 ‘민간 차원’에서 자국의 이념적 기반인 와하비즘을 여타 이슬람권에 확산시켜 이슬람권 전체의 맹주로 군림한다는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이를 위해 유럽 등 **非이슬람권**까지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모스크(이슬람 사원) 건설과 마드라사(이슬람 신학교) 설립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와하비즘 사상을 설파하는 설교자들을 파견하여 해당 국가들에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
 - ※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슬람 신학 전공으로 유학한 한국인 무슬림들 중 일부도 최근 국내 포털 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국내에서 와하비즘을 설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아울러 현재 발호하고 있는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들의 급속한 성장의 배후에도 이들의 재정적 지원이 밑거름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음.
- 영국의 외교 싱크탱크인 Henry Jackson Society(HJS)가 7월 초 공개한 보고서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걸프 국가들은 수십년 간 이슬람 극단주의를 후원해 오고 있음.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1960년대부터 중동 지역은 물론 서방의 이슬람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와하비즘 전파를 위해 거액의 재정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지원은 대부분 모스크에 대한 기부금 형태로, 극단주의 연설과 극단주의 문서 배포에 사용됨. 또한 영국 내 유명 이슬람 극단주의 연설가들 중 대부분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장학금 프로젝트 하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슬람 신학 교육과정을 밟은 것으로 나타남.
 - HJS는 보고서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사상 전파와 관련된 외국의 후원에 대한 영국 정부의 공개 조사를 촉구하였으나, 영국은 2015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에 65억 파운드 이상의 상품 및 서비스를 수출한 바 있어 영국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심기를 거스르는 조치를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2. 카타르의 개혁정책과 중립 외교정책, 사우디아라비아의 패권 전략과 충돌

□ 개혁정책 추구와 Al-Jazeera 방송, 여타 왕정 국가들의 반발 초래

- 2013년 6월 25일 부친 Hamad 前국왕의 돌연한 양위 발표에 이어 당년 33세의 젊은 나이로 즉위한 카타르의 Tamim 국왕은 신규 내각을 구성하여 단기간 내에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고, Hamad 前국왕의 점진적인 개혁 추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음.

- 국왕이 고령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지라도 타계할 때까지 계속 재위하는 것이 관례인 걸프 지역 왕정국가들(특히 최근까지 왕위 계승자들도 대부분 노령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에게, Hamad 前국왕이 당년 33세의 젊은 Tamim 국왕에게 양위한 사건은 그 자체로 ‘역내의 기존 질서를 뒤 흔드는’ 충격적인 결정이었음.
- 실제로 Hamad 前국왕의 전격적인 양위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지역 왕정국가들이 개혁정책 추진을 견제하고 방해하는 데 대한 Hamad 前국왕의 회심의 반격이었다는 분석도 제기됨.
- Tamim 국왕은 총리가 카타르 국부펀드(QIA)의 CEO를 겸임하고 에너지부 장관이 카타르 국영석유회사(Qatar Petroleum)의 CEO를 겸임하던 관례를 종식시켜, QIA와 Qatar Petroleum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카타르는 이미 2003년 GCC 회원국으로는 최초로 성문헌법을 제정하여 2005년 6월 발효시켰음. 동 헌법은 정당활동과 완전한 의회기능을 보장하지 않지만 3권 분립의 토대가 되었으며,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갖는 자문위원회(Majlis al Shura)가 의회의 역할을 수행함.
 - 또한 이전까지 별도로 유지되던 종교법원을 일반법원에 편입시키는 사법 개혁을 단행하고,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아울러 1996년 카타르에서 창설된 위성 방송사 Al-Jazeera는 대부분 정부의 어용 언론에 불과한 걸프 지역 방송사들과는 달리 역내 국가들의 정치적, 사회적 현안에 대한 직설적인 보도를 통해 “중동의 CNN”으로 불리며 국제적인 신뢰도와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음.
-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등은 카타르 정부의 개혁정책 추진과 Al-Jazeera 방송을 통해 자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언론 자유에 대한 요구와 개혁적 여론이 조성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여, 이를 카타르의 내정 간섭이라 주장하며 비난하고 있음.
 -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등도 자국의 정치적, 사회적 현안(이집트 군경의 불법적인 시민 체포·감금, 요르단의 팔레스타인 난민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 강행으로 인한 갈등)을 여과 없이 보도하는 Al-Jazeera 방송을 적대시하여 취재진의 체포·구금, 자국 내의 보도지국 폐쇄 등의 탄압을 가하고 있음.

□ 강대국 사이에 낀 소국으로서 독자적, 다원적 외교노선 견지

- 걸프 지역 내에서도 바레인과 더불어 소국(小國)인 카타르는 수니파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의 영향력 하에 있는 동시에 그 속적인 시아파의 맹주 이란과의 특수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독자적, 중립적, 다원적 외교노선을 견지하고 있음.
 - 카타르 왕실 al-Thani 가문은 종교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al-Saud 가문과 마찬가지로 와하비즘의 영향력 하에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마저 추방된 급진 와하비즘 설교자들을 받아들인 적도 있는 동시에 시아파인 이란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카타르는 GCC 회원국이자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이란은 물론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이집트의 무슬림형제단 등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한 걸프 지역 국가들이 테러 집단으로 규정한 단체·조직들과도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무슬림형제단 등 몇몇 조직들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한 공화주의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공화정 운동을 극도로 경계하는 절대왕정 국가들에 의해 일괄적으로 테러 집단으로 규정됨.
- 즉, 카타르는 특정한 종교적 이념에 좌우되지 않고 ‘누구와도 원한 관계를 맺지 않으며, 따라서 누구와도 친교를 맺을 수 있다’는 전형적인 중립 외교노선을 채택하여 “중동의 스위스”로 불리며, 이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부터 ‘박쥐 외교’라는 비난을 받아 왔음.

□ 카타르는 South Pars 가스전을 공유하는 이란과 ‘특수 관계’

- 카타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가스전인 South Pars 해양가스전을 이란과 공유하고 있으며, 카타르의 최대 소득원인 수출용 천연가스·LNG를 수송하는 선박들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함.
 - South Pars 해양가스전의 추정매장량은 천연가스 14조 m³, 가스 콘덴세이트(특경질원유) 180억 배럴 규모임.
- 국가경제의 절대적인 부분을 천연가스 생산 및 수출에 의존하는 카타르로서는 이러한 특수 관계에 있는 이란과의 우호관계 유지가 필수 불가결하며,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우호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음.

- 2016년 1월의 경제제재 해제로 이란이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GCC 회원국인 카타르가 자신의 위성국으로서 존재하기를 거부하고 이란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임.

— 5월 19일의 이란 대선 결과 개혁지향적인 Hassan Rouhani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여 이란의 대외 개방정책 추진 및 걸프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도 이란의 국제적 고립을 바라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지극히 부정적인 변화임.

<그림 1> 카타르의 지리적 위치: 사우디아라비아와 육상 국경선, 이란과 해상가스선 공유



□ 카타르 내의 무슬림형제단은 단교 조치의 중요한 표적

- 무슬림형제단은 1928년 이집트에서 창설되어 중동 각지로 퍼져나간 세계 최대 규모의 이슬람주의 단체로,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인 정교분리(政教分離)의 세속주의(secularism)를 배격하고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의한 통치를 바탕으로 하는 ‘이슬람 공화정’의 수립을 추구하고 있음.
- 세속주의 배격과 샤리아에 의한 통치 추구는 와하비즘과 동일하나, 이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슬람주의에 기반한 공화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의 왕정 국가들에게는 배척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이집트에서 Hosni Mubarak 정권 붕괴 후 2012년 집권한 Mohamed Morsi 정부가 무슬림형제단을 정치적 기반으로 이슬람주의 정책을 강행하다 2013년 Abdel Fattah el-Sisi 국방장관(現 이집트 대통령) 주도의 쿠데타로 붕괴된 뒤,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왕정 국가들은 el-Sisi 정권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무슬림형제단 탄압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음.
- 그러나 카타르는 중립외교의 원칙을 내세워 Morsi 정부를 공개적으로 지원하였으며, Morsi 정부 붕괴 후에도 무슬림형제단의 학문적 지도자인 이집트 국적의 Yusuf Abdullah al-Qaradawi의 카타르 망명을 허용하는 등 여타 중동 왕정 국가들과는 반대의 행보를 보여 왔음.
- 이에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금번 단교 사태를 기회로 카타르 내의 무슬림형제단을 제거함으로써 그 존속기반을 더욱 위축시키고자, 카타르에게 무슬림형제단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al-Qaradawi를 이집트로 강제송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III. 단교 주도국들, 카타르에 압박 계속

1.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 카타르에 관계 정상화를 위한 13개 조건의 이행 요구 등 내정간섭적 압박

□ 6월 22일 :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 카타르에 관계 정상화를 위한 13개 조건의 이행 요구

-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은 6월 22일 쿠웨이트를 통해 카타르에 외교관계 정상화 및 경제봉쇄 해제를 위한 13개 조건을 전달하고 이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음.
 - 쿠웨이트는 사태 초기부터 Sabah al-Ahmad 국왕이 해결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으며, 전통적으로 걸프 지역에서 역내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해온 오만도 중재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쿠웨이트와 오만은 GCC 회원국임에도 카타르와의 단교 조치에 동참하지 않고 중립적 자세를 고수하고 있음. 특히 오만의 경우 수니파, 시아파와는 다른 이바디파 이슬람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특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역내의 중립국과도 같은 위치이며, 이란과도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음.

- 표면상으로는 4개국이 공동으로 카타르에 요구하는 형태이나, 실제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카타르를 자신의 보호국 수준으로 묶어두려는 의도에 따른 요구로 분석됨.

□ 13개 조건의 핵심: 이란·무슬림형제단과의 관계 격하·단절

-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이 공동으로 카타르에 요구한, 관계 정상화를 위한 13개 이행조건은 다음과 같음.³⁾
 - 1) 이란과의 외교관계를 격하시키고, 카타르 주재 이란 외교공관을 폐쇄하며, 이란 혁명수비대 대원들을 카타르에서 추방하고, 이란과의 군사·정보 협력을 중단할 것. 이란과의 무역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 이란 경제제재(대 이란 거래에서 미 달러화 사용 금지 등)를 준수하며 GCC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⁴⁾
 - 2) 현재 진행 중인 카타르 내의 터키군 기지 건설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폐쇄하며, 카타르 국내에서의 터키와의 군사적 협력(카타르 국내의 터키군 주둔 허용 등 포함)을 중단할 것.⁵⁾
 - 3) 테러리즘, 종파주의, 이념과 관련된 모든 조직들, 특히 무슬림형제단, IS(이슬람국가), 알카에다, Fateh al-Sham(舊누스라해방전선), 헤즈볼라와의 연계를 단절할 것.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 정부가 공동 발표한 테러 조직 명단에 따라 상기 조직들을 테러 조직으로 공식 선언하고, 동 명단의 향후 모든 업데이트에 동의하여 명단에 추가되는 조직들을 테러 조직으로 선포할 것.⁶⁾
 - 4)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 미국 및 여타 국가의 정부들에 의해 테러리스트로 지정된 개인, 단체, 조직에 대한 모든 종류의 자금지원을 중단할 것.⁷⁾

3) Al-Jazeera 방송국 웹사이트에 게재된 영문본을 번역하였으며, 각 요구조건의 해당 영문본은 각주로 추가하였음.
(영문본 주소 - <http://www.aljazeera.com/news/2017/06/arab-states-issue-list-demands-qatar-crisis-170623022133024.html>)

4) Scale down diplomatic ties with Iran and close the Iranian diplomatic missions in Qatar, expel members of Iran's Revolutionary Guard and cut off military and intelligence cooperation with Iran. Trade and commerce with Iran must comply with US and international sanctions in a manner that does not jeopardise the security of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5) Immediately shut down the Turkish military base, which is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and halt military cooperation with Turkey inside of Qatar.

6) Sever ties to all "terrorist, sectarian and ideological organisations", specifically the Muslim Brotherhood, ISIL, al-Qaeda, Fateh al-Sham (formerly known as the Nusra Front) and Lebanon's Hezbollah. Formally declare these entities as terror groups as per the list announced by Saudi Arabia, Bahrain, UAE and Egypt, and concur with all future updates of this list.

- 5) 카타르 내에 체류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 국적의 “테러리스트 인물들”, 테러리즘과 연계되어 국외로 도피한 자들, 지명수배자들을 각자의 본국으로 강제 송환할 것. 또한 그들의 자산을 전면 동결하고, 그들의 카타르 내 과거 거주지, 이동, 재정상태에 관하여 그들의 본국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⁸⁾
- 6) Al-Jazeera 방송국 및 그 산하 계열 방송사들을 폐쇄할 것.⁹⁾
- 7) 주권국가의 내정 문제에 대한 간섭을 중단할 것.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 국적의 지명수배자들에 대한 카타르 시민권의 부여를 중단할 것. 이들 국가 출신자들에 대한 카타르 시민권의 부여가 이들 국가들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카타르 시민권 부여를 취소할 것.¹⁰⁾
- 8) 카타르 정부의 최근 정책(테러리즘 지원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인명 및 재정상의 손실에 대한 배상금 및 보상금을 지불할 것. 배상금 및 보상금의 총액은 카타르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¹¹⁾
- 9)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합의(리야드 협약)에 따라, 카타르의 군사·정치·사회·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실행은 물론 경제적 현안에서도 여타 걸프 지역 국가들 및 아랍 국가들과 공동 보조를 취할 것.¹²⁾
- 10)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는 측과의 접촉을 중단할 것.¹³⁾

7) Stop all means of funding for individuals, groups or organisations that have been designated as terrorists by Saudi Arabia, UAE, Egypt, Bahrain, US and other countries.

8) Hand over “terrorist figures”, fugitives and wanted individuals from Saudi Arabia, the UAE, Egypt and Bahrain to their countries of origin. Freeze their assets, and provide any desired information about their residency, movements and finances.

9) Shut down Al-Jazeera and its affiliate stations.

10) End interference in sovereign countries’ internal affairs. Stop granting citizenship to wanted nationals from Saudi Arabia, UAE, Egypt and Bahrain. Revoke Qatari citizenship for nationals where such citizenship violates those countries’ laws.

11) Pay reparations and compensation for loss of life and other financial losses caused by Qatar’s policies in recent years. The sum will be determined in coordination with Qatar.

12) Align Qatar’s military,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with the other Gulf and Arab countries, as well as on economic matters, as per the 2014 agreement reached with Saudi Arabia.

13) Cease contact with the political opposition in Saudi Arabia, the UAE, Egypt and Bahrain. Hand over files detailing Qatar’s prior contact with and support for opposition groups, and submit details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support Qatar has provided them.

- 11) 직·간접적으로 카타르의 자금 지원을 받는 모든 뉴스 채널들(구체적으로 Arabi21, Rassd, Al Araby al Jadeed, Mekameleen, Middle East Eye 등)을 폐쇄할 것.¹⁴⁾
- 12) 동 목록상의 모든 요구조건을 이행할 것임을 동 목록이 카타르에 전달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동의할 것.¹⁵⁾
- 13) 동 목록상의 요구조건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시행 첫 해 매월, 이듬해 매 분기, 이후 10년 간 매년 감사를 받는 데 동의할 것.¹⁶⁾

□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에게 의도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요구하여 사태를 악화시키려는 계획일 가능성

- 상기 13개 이행조건은 전반적으로 독립된 주권국가(sovvereign state)로서의 카타르의 주권을 다양한 방향에서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 특히 1번은 외교주권, 2번은 군사주권, 6번과 11번은 외교주권과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내용임.
 - 7번을 통해 “주권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의 중단”을 카타르에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카타르의 내정에 간섭하는 모순도 불사하고 있음.
 - 8번은 자신들이 카타르에 대해 일방적으로 단행한 경제제재 조치로 인해 자국에 발생한 피해액까지 카타르에게 보상을 요구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
 - 13번은 카타르를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없는, 감시가 필요한 상대’로 부각시켜 사우디아라비아의 보호국 수준으로 취급함으로써 굴욕을 안겨 주려는 의도로 의심됨.
- 즉, 사우디아라비아는 카타르가 주권국가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이행조건을 요구하여 카타르의 거부를 유도함으로써 사태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는 한편, 이에 대한 책임을 카타르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추정됨.

14) Shut down all news outlets funded directly and indirectly by Qatar, including Arabi21, Rassd, Al Araby Al Jadeed, Mekameleen and Middle East Eye, etc.

15) Agree to all the demands within 10 days of list being submitted to Qatar, or the list will become invalid.

16) Consent to monthly compliance audits in the first year after agreeing to the demands, followed by quarterly audits in the second year, and annual audits in the following 10 years.

-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러한 태도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간의 갈등을 연상시키는 면이 있음.¹⁷⁾ 즉, 강경파의 주도로 상대방에 대해 수용 불가능한 수준의 이행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자국의 카타르에 대한 향후 조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추정됨.
- 따라서 카타르에 대한 내정간섭적 요구조건은 처음부터 카타르의 전면 거부를 유도하기 위해 QNA 오보 사태 이전부터 면밀히 계획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함.
- 최악의 경우 카타르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침공, 차악의 경우 카타르 내부의 군사 쿠데타 등을 독려하여 카타르의 정권 교체를 이끌어내려는 계획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다만, 카타르의 Al-Udeid 공군 기지에 미 공군 1만여 명이 주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우디아라비아가 카타르에 대해 예멘의 경우처럼 실제로 군사적 침공까지 감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임.

□ 미 정보당국, 아랍에미리트가 QNA 해킹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

- 미국 Washington Post는 7월 16일 다수의 미 정보당국 관계자들을 인용,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단교 사태의 발단이 된 QNA의 ‘가짜 기사’ 송출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였음.
- 보도 내용에 의하면 아랍에미리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중동 순방 기간 중인 5월 23일 가짜 기사 송출을 위한 해킹을 수행할 계획과 방식과 관련해 논의하였으며, 이튿날인 5월 24일 해킹에 의한 가짜 기사 송출이 발생하였음.
- 미 정보당국 관계자들은 해킹 관련 정보를 분석한 결과 7월 중순경 이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짐. 다만, 해킹이 아랍에미리트 정보당국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타 3개국(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바레인)이 가담했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함.
-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해당 보도 내용을 즉각 부인하였으나, 카타르 단교 사태 및 경제봉쇄가 사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도로 4개국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되었다는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음.

17)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 부부가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의 사라예보에서 세르비아계 극우파 청년에게 암살당한 “사라예보 사건” 직후, 전부터 보스니아의 영유권 문제로 발칸 반도에서 세르비아와 갈등을 거듭하던 오스트리아는 정부 내 강경파의 주도로 7월 23일 세르비아에 대해 내정간섭적인 성격이 명백한 10개 세부항목의 이행(소위 “7월 최후통첩”)을 요구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세르비아의 거부를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7월 28일 선전포고를 감행,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음.

2.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 카타르에 6대 원칙 제시와 테러리스트 명단 추가 등의 강·온 작전 병행

□ 7월 18일 : 기존의 13개 조건을 “광범위한 6대 원칙”으로 축소

-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은 7월 5일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가진 데 이어, 7월 18일 카타르에 대하여 관계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기존의 13개 요구조건을 대체하는 성격의 “**광범위한 6대 원칙**”(six broad principles)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음.¹⁸⁾
 - 1) 모든 형태의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에 맞서 싸우고, 테러 단체에 자금 또는 은신처 제공 금지¹⁹⁾
 - 2) 증오와 폭력을 부추기는 도발 및 발언 중단²⁰⁾
 - 3) GCC 체제 내에서 2013년의 리야드 협약(Riyadh Agreement), 2014년의 부속합의 및 실행 메커니즘 준수²¹⁾
 - 4) 5월 리야드에서 개최된 아랍 이슬람-미국 정상회의의 모든 결과(각종 선언 등)의 고수²²⁾
 - 5) 내정간섭과 불법조직 지원 금지²³⁾
 - 6)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에 맞서는 책임 이행²⁴⁾
- 앞서의 13개 요구조건에 비해 이란과의 외교관계 격하, 터키와의 군사협력 취소, Al-Jazeera 방송의 폐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빠지고 **보다 포괄적인 의미의 요구조건**을 제시하였음.

18) Al-Jazeera 방송국 웹사이트에 게재된 영문본을 번역하였으며, 각 요구조건의 해당 영문본은 각주로 추가하였음.
(영문본 주소 - <http://www.aljazeera.com/indepth/opinion/2017/07/turning-point-gcc-crisis-170707074800456.html>)

19) Commitment to combat extremism and terrorism in all their forms and to prevent their financing or providing havens.

20) Suspending all acts of provocation and speeches inciting hatred or violence.

21) Full compliance with the Riyadh Agreement of 2013 and the supplementary agreement and its implementation mechanisms of 2014 within the framework of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22) Adherence to all the outcomes of the Arab Islamic American Summit held in May 2017 in Riyadh.

23) Refraining from interfering in the internal affairs of states and from supporting illegal entities.

24) The responsibility of all stat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nfront all forms of extremism and terrorism as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 아랍에미리트의 Abdullah bin Zayed al-Nahyan 외무장관은 기존의 Al-Jazeera 방송 폐쇄 요구에 대하여 “Al-Jazeera 폐쇄를 포함하여 사태가 해결된다면 좋은 일이며, Al-Jazeera 폐쇄 없이 사태가 해결된다면 그 또한 좋은 일”이라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표명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기대와 달리 카타르가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며 장기전에 돌입하려는 준비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한편, 세계 여론도 카타르에 보다 동정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상황 전개에 당혹한 결과라는 지적이 있음.
 - Al-Jazeera 방송 및 그 산하 방송사들을 비롯하여 카타르의 자금지원을 받는 모든 뉴스 채널들을 폐쇄하라는 4개국의 요구에 대하여 서방 국가들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6대 원칙의 포괄적인 내용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카타르의 외교정책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6대 원칙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확대 해석하여 내정간섭을 자행할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카타르에게는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음.
- 7월 24일 : 카타르 단교 사태 관련 “카타르와 연계된 테러리스트 및 테러 조직” 명단 추가 발표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바레인 4개국은 앞서 6월 8일에 이어 7월 24일 카타르 단교 사태 관련 “카타르와 연계된 테러리스트 및 테러 조직” 명단을 추가로 발표하였음.
 - 동 명단은 카타르, 예멘, 리비아, 쿠웨이트 국적의 개인 9명 및 예멘, 리비아 소재 9개 단체를 열거하고 있음.
 - 예멘 소재 단체는 모두 자선단체를 표방하고 있으나, 리비아 소재 단체는 이슬람주의 군사조직인 벵가지 혁명 슈라위원회(Benghazi Revolutionaries Shura Council) 및 현지 언론 매체들을 포함하고 있음.
 - 4개국은 향후에도 테러리스트 및 테러 조직들이 카타르와 연계되었다고 추가 발표함으로써 카타르에 테러 지원국의 이미지를 덧씌워 국제사회에서 카타르의 입지를 계속 위축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됨.

□ 7월 30일 : 4개국 외무장관, 카타르에게 기존의 13개 요구조건을 수용할 것을 재차 촉구

-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은 7월 30일 바레인의 마나마에서 회담을 갖고, 카타르에게 관계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기존의 13개 요구조건을 수용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Adel al-Jubeir 외무장관은 “13개 요구조건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이를 축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였음.
- 4개국이 앞서 7월 18일 기존의 13개 조건을 6대 원칙으로 축소하여 발표한 지 12일 만에 일관성 없이 다시 13개 조건의 수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카타르가 여전히 굴복을 거부하고 장기전에 대비하는 등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자 다시 강경 자세로 선회한 것으로 추정됨.

□ 오일머니를 무기로 역외국들에 對카타르 보이콧 동참 압력 행사

-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은 과거 이란의 핵개발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및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한 Secondary Sanction과 같은 조치를 카타르와 거래하는 제3국 정부 또는 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駐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대사인 Omar Ghobash는 6월 27일 영국 Guardian과의 인터뷰에서 “카타르와 거래하는 제3국 정부와 기업에게 ‘카타르와 4개국 중 양자택일’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음.
 - 이러한 ‘양자택일’은 카타르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프로젝트 등을 수주하는 제3국 기업들에 대해 4개국 정부가 자국에서 시행하는 건설 프로젝트 등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금지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카타르산 천연가스 또는 LNG를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해 자국산 원유 수출을 제한하는 식의 보이콧이 될 수 있음.
 - Ghobash 대사는 카타르의 GCC 퇴출 가능성도 시사하며, “카타르의 테러리스트 및 테러 조직 지원은 공동의 안보·방위를 추구하는 GCC의 목표와 모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은 외국 금융기관들에게도 카타르와의 거래를 단절할 것을 요구하는 비공식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영국 Financial Times의 8월 9일자 기사에 의하면,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카타르 왕실 및 카타르 국부펀드(QIA)가 일부 지분을 보유한 Barclays(지분율 6%), Credit Suisse(지분율 5%), Deutsche Bank(지분율 6%) 등 유럽계 은행들과의 거래를 비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4개국인 카타르 금융기관들의 GCC 역내 거래를 중단시키고 테러리즘 지원을 빌미로 자국 내 카타르 관련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3. 카타르의 경제상황과 국가신용도에 대한 악영향의 가시화

□ 국제신용평가사들, 카타르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 국제신용평가사들은 단교 사태 및 경제붕쇄 발생을 전후하여 카타르의 외화표시 장기국채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 Moody’s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타 GCC 회원국들과의 갈등 고조, 공공 부채 및 총외채잔액 규모의 증가 등을 이유로 가장 먼저 카타르의 신용등급을 Aa2(’16.5.14)에서 Aa3(’17.5.26)로 하향 조정하였음.
- Fitch는 카타르에 대하여 종전 평가시(’16.9.2.) 부여한 AA의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對카타르 단교 사태 및 경제붕쇄 조치의 영향을 감안하여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 ’17.6.12.)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로 주가지수, CDS 등의 변동폭 확대

- 카타르의 주가지수는 단교 사태 전인 5월 중에는 10,000선을 유지하였으나, 단교 사태 및 경제붕쇄 이후 급락하여 6월 21일 8,777.73까지 하락하여 최근 1년 간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 이후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 등으로 7월 하순 9,500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반등하였으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의 압박 수위가 다시 강해지며 경제붕쇄 사태가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자 8월 들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8월 하순 현재 9,000대에 머무르고 있음.

<그림 2> 최근 1년 간 카타르의 주가지수 동향 (2016.8.22. ~ 2017.8.21.)



자료: Bloomberg

○ 카타르의 CDS²⁵⁾ 프리미엄(5년물)은 2017년 3월 들어 70bp 미만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여 5월 30일 56.28bp까지 하락하였으나, 단교 사태 및 경제봉쇄 이후 급등하여 6월 초순 100bp를 돌파한 데 이어 7월 7일 124.32bp로 최근 1년 간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다만, 경제봉쇄에 대한 카타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면돌파 의지 등에 힘입어 7월 하순 이후 100bp 미만으로 하락하여 현재 90bp대에서 소폭 등락하고 있으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다시 120bp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25) Credit Default Swap. 대출이나 채권 투자시 부도, 파산, 지급불이행 등 신용자산 가치 감소 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는 파생상품으로, 신용위험을 본래의 자산에서 분리시키는 기능을 수행함. CDS 프리미엄은 동 상품의 수수료이며, bp(basis point) 단위로 표시함(1bp = 0.01%). CDS 프리미엄은 채권발행 기관 또는 정부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상승함.

<그림 3> 최근 1년 간 카타르의 CDS 동향 (2016.8.22. ~ 2017.8.21.)



자료: Bloomberg

□ 카타르 은행들의 외국인 예금 감소 추세 지속

- 카타르 중앙은행에 따르면, 카타르 은행들의 외국인 예금 총액은 약 432억 달러로 전월대비 8% 감소하였음. 외국인 예금은 경제봉쇄가 시작된 6월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전월대비 감소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외국인 예금 총액이 전체 은행 예금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월의 24%에서 20%로 줄어들었음.
 - 외국인 예금 총액의 감소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 이 카타르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외국인들의 불안 심리를 반영한 결과로 관측됨.
- 현지 분석가들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 소재 고객들이 만기 도래 예금을 재예치하지 않을 것이며, 제3국 고객들도 예금 부족 사태의 발생을 우려하여 역시 재예치를 주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 이에 Moody's는 카타르 은행들이 자금 조달 압력에 계속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여, 8월 8일 카타르 은행 시스템의 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Stable)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IV. 향후 전망과 시사점 및 대응

□ 당초 예상과 달리 사우디아라비아의 과격한 내정간섭적 요구와 카타르의 장기전 불사 의지로 사태의 조기 해결은 어려울 전망

- 단교 선언 당시에는 당사국들이 막후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태가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었으나, 이후 사우디아라비아가 카타르에 대해 과격한 수준의 내정간섭적 요구를 강제하고 이를 카타르가 거부함에 따라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 카타르는 North Dome / South Pars 가스전을 공유하는 이란과의 관계 격화 요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며, 그 외의 요구조건들도 카타르의 주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굴욕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카타르가 이를 전면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임.
-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란과 터키가 카타르에 대한 지원을 선언하고 나섰으며, GCC 회원국임에도 중립을 고수하고 있는 쿠웨이트와 오만이 단교 사태를 무마하기 위하여 중재에 나서는 등 역내 상황이 카타르에게 불리하지만은 않은 상태임.
- 현재 카타르는 쿠웨이트와 오만을 경유하는 해상운송 루트의 운용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항공/해운/육로 운송 봉쇄에 맞서며 장기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음.
 - 카타르는 경제봉쇄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을 경유하는 항공/해운/육로 운송이 6월 6일부로 전면 차단되자 이에 대응하여 오만의 Salalah 항과 Sohar 항을 이용하는 해상운송을 통한 수출입 루트의 운용을 개시한 데 이어, 8월에는 쿠웨이트의 Shuwaikh 항을 이용하는 해상운송을 개시하였음.

□ 단교 사태가 OPEC 내부의 갈등으로 변질 가능성이 고조됨에 따라 감산 합의 연장 전망도 불투명

- 석유수출국기구(OPEC)은 저유가 추세의 지속으로 회원국들의 경제에도 위험신호가 나타나자, 2016년 11월 30일 OPEC의 일일 평균 산유량 상한을 120만 배럴(당시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1%) 감축한 3,250만 배럴로 정하는 6개월 간의 감산에 전격 합의한 바 있음.

- 동 감산 합의 당시 이란은 그간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당초 생산량보다 20만 배럴 증가한 일일 평균 397.5만 배럴 생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킨 바 있음.
 - 한편, 러시아 등 11개 OPEC 비회원 산유국들도 12월 10일 일일 평균 산유량을 55.8만 배럴 감축키로 합의하였음.
 - 이후 OPEC은 5월 25일 현재의 일일 감산규모를 내년 3월까지 9개월 더 연장하여 적용키로 합의하였음.
 - 그러나 국제에너지기구(IEA)의 Oil Market Report(2017.8월호)에 따르면, OPEC의 7월 중 일일 평균 산유량은 리비아의 급속한 생산량 회복 및 회원국들의 감산 합의 준수를 하락으로 인해 총 3,284만 배럴로 전월대비 23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동 보고서에 의하면 OPEC 회원국들의 감산 합의 준수비율은 7월 중 75%로 집계되어 금년 중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7월까지의 연중 준수비율은 87%로 집계됨).
 - 감산 합의를 주도한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산유량 한도인 1,005.8만 배럴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짐. 아울러 OPEC 비회원국들의 일일 평균 산유량 역시 전월대비 29만 배럴 증가하여, 7월 중 전 세계 일일 평균 산유량은 전월대비 52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이러한 상황에서 단교 사태의 지속이 OPEC 내부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반카타르 진영과 이란으로 대표되는 친카타르 진영 간의 대립이라는 형태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 그리고 이 갈등이 향후 원유 감산 합의의 연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음.
- 경제봉쇄는 단기적으로는 카타르 경제에 타격을 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영향이 희석될 전망
- Bloomberg는 8월 17일자 기사에서, 2017년 카타르 경제가 단교 사태 및 경제봉쇄의 여파로 인해 1995년 이래 최저 수준인 2.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음.²⁶⁾ 아울러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도 -5.1%로 6월(-4.6%)보다 부정적으로 전망하였음.
 - 앞서 6월에 Bloomberg는 카타르의 2017년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한 바 있음.

26) 기사 링크 -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7-08-17/qatar-s-growth-prospects-dim-as-saudi-led-boycott-takes-its-toll>

- 그러나 Bloomberg는 동일 기사에서 2018년에는 무역통로의 다원화(이란, 터키 등을 통한 수출입 증가) 등 카타르 정부의 대응조치로 경제붕쇄 효과가 희석됨에 따라 카타르의 경제성장률이 3.2%로 회복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제붕쇄 효과가 완전히 상쇄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단교 사태의 추이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내 정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 사우디아라비아 Salman 국왕의 장남이자 사실상의 국왕으로 예멘 내전 개입에 이어 對카타르 단교 사태 및 경제붕쇄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 여부**는 금번 사태의 향방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됨.
- 지난 6월 21일 Salman 국왕의 명에 의해 제1부총리 겸 내무장관인 Muhammad bin Nayef 前왕세자(국왕의 조카)가 왕세자직을 비롯한 모든 관직을 전격 박탈당한 데 이어 무기한 가택연금까지 당한 배후에도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테러 정책을 총지휘해온 책임자이자 서방 국가의 정보기관들과 긴밀한 유대를 맺어온 Muhammad bin Nayef 前왕세자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높음.
- 왕실 내 왕족들 가운데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의 일방통행적 전횡에 불만을 품고 Muhammad bin Nayef 前왕세자를 지지하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왕실 내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대두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對카타르 단교 사태의 결과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으로 귀결될 경우,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의 정치적 입지 약화와 그로 인한 권력 다툼이 발생하여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됨.
 - 사우디아라비아는 카타르의 GCC 탈퇴 가능성에 대해 표면상으로는 어디까지나 카타르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며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나, 실제로 카타르가 GCC를 전격 탈퇴하고 이란, 터키와의 협력을 강화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에 상당한 정치적, 외교적 타격이 될 것이며 Muhammad bin Salman 왕세자의 정치적 입지도 크게 흔들릴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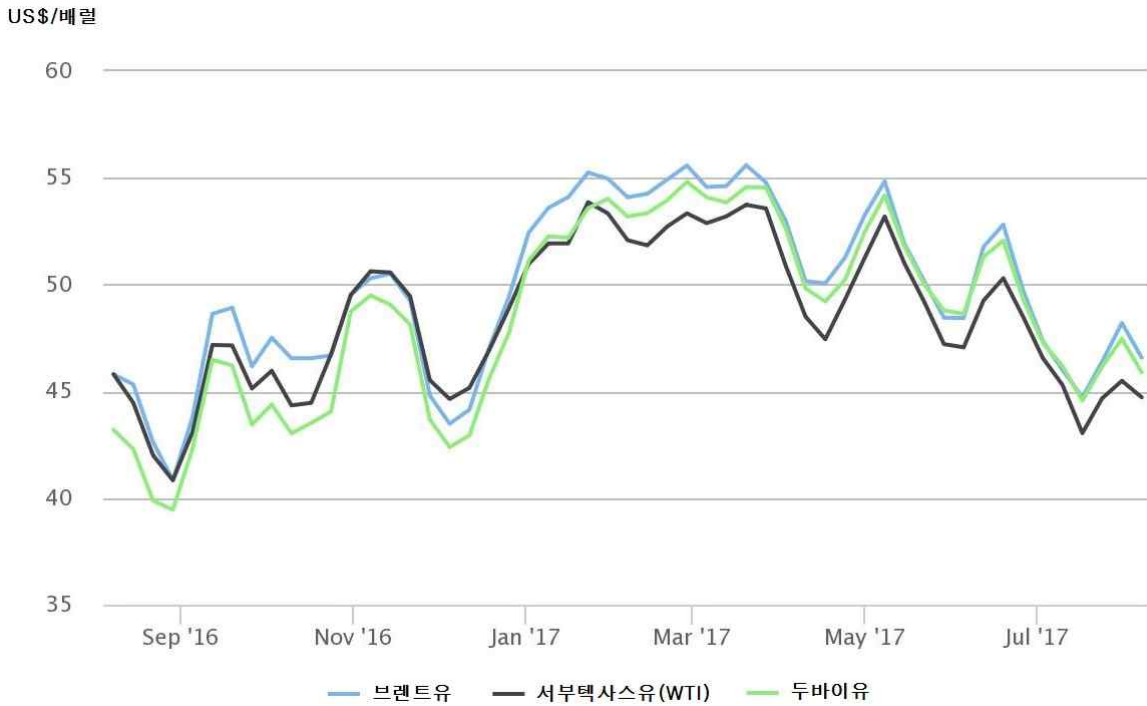
□ 미국 정부는 사태의 조기 해결을 바라지만 Trump 대통령의 부적절한 태도로 고심

-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동맹 관계에 있는 동시에 현재 카타르의 Al Udeid 공군 기지에 미 공군 1만여 명이 주둔해 있는 등 자국의 대 중동 전략에서 카타르가 지니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단교 사태에 대해 대화를 통한 조속한 갈등 해소를 추구하고 있음.
 - 對카타르 ‘봉쇄 정책’의 결과 카타르가 GCC를 탈퇴하고 이란과 공개적으로 손을 잡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는 물론 미국에게도 최악의 상황임.
- 그러나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對카타르 단교 사태를 지지하고 카타르를 테러 지원국으로 규정하는 뉘앙스의 글을 올려,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상반되는 부적절한 태도로 물의를 빚은 바 있음.
 - Trump 대통령은 지난 5월 중동 순방에서 이란에 적대적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힘으로써 사우디아라비아의 대 이란 봉쇄정책에 힘을 실어주었으며, 이는 금번 단교 사태에 하나의 촉매제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카타르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경우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중요한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심기를 거스를 것을 우려한 미국 정부는 동 사태에 대하여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 당행의 대응 : 카타르에 대한 국별여신한도 점검 등 당행 여신의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로 배럴당 55달러 안팎까지 일시 상승했던 국제유가는 미국의 셰일오일 수출 증가, 중국의 원유수요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 7월 하순 이후 다시 배럴당 50달러 아래로 하락하였음.
- 세계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이 가시화되고 특히 중국의 석유소비가 증가하기 전에는 배럴당 60달러 이상 수준으로의 지속가능한 유가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중동 지역 산유국들의 국가신용등급은 상당한 기간 동안 하향 조정의 압력에 노출될 전망이다.
 - 저성장과 쌍둥이 적자에 더하여 재정적자 보충을 위한 국채 발행의 증가로 회원국들의 부채비율 악화가 우려되며, 석유의존도 축소를 위한 산업다각화 정책은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아직까지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음.

<그림 4> 최근 1년 간 국제유가 동향



자료: IEA Oil Market Report (2017.8월호)

- 이러한 상황에서 단교 사태 및 경제봉쇄로 인한 걸프 지역의 불안정 지속과 불확실성 고조는 카타르는 물론 당행 여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관련 당사국들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에도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이들 국가들의 국별 리스크 상시 점검 및 국별신용도 등급 조정 검토를 통해 당행 여신의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 기업들의 대응 : 카타르 관련 수주시 주의 필요

-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은 對카타르 경제봉쇄 조치의 효과를 증폭시키고자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 정부의 對이란 Secondary Sanction을 모방하여, 카타르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 대해 자국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건설기업의 경우 카타르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프로젝트 수주시 4개국 정부가 자국에서 시행하는 건설 프로젝트 등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금지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카타르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프로젝트 수주를 추진하는 건설기업들은 4개국 정부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향후 4개국에서의 건설 프로젝트 발주 참여시 동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음.

<표 1> 2017. 1~7월 중 우리 건설기업들의 경제봉쇄 당사국들과의 계약 체결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국가명	기간 중 계약액			
	2015년	2016년	(2016.1~7월)	2017.1~7월
카타르	2,132	467	(181)	773
사우디아라비아	3,592	4,159	(1,009)	1,083
아랍에미리트	382	1,658	(187)	230
바레인	655	10	(-)	-
이집트	45	14	(1)	-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문의 : 해외경제연구소 지역연구팀
선임조사역 오경일(02-3779-6664)
oki1122@koreaexim.go.kr